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따뜻한 권익구제, 반듯한 청렴사회-

2024. 2.



국민권익위원회

순서

I. 추진성과와 평가	1
II. 2024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2
III. 2024년 부처 핵심 추진과제	4
1. 현장·민생 중심의 빈틈 없는 권익구제	4
2. 국민참여·데이터 기반 신속한 제도개선	8
3. 이권·카르텔 없는 청렴사회 실현	11

I. 추진성과와 평가

1 주요 정책 성과

- **(권익보호)** 국민의 입장에서 민생고충을 적극 해소(2,677건), 기획조사를 통해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고 민원 발생의 근본원인을 개선(20건)
※ △불법주정차 신고구역 확대(인도.횡단보도 정지선 등), △귀금속 거래를 이용한 피싱 범죄 예방 등
- **(제도개선)** 민원 빅데이터 분석, 정책제안·국민생각함 등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정책화하여 청년·취약계층 보호 및 규제 완화에 기여
※ △국가자격시험 공인어학시험 인정기한 확대^{국정교제}, △취약계층의 체납 건보료 분할납부 기준 완화
※ 국민제안 55,000건 모니터링 후 소관기관 연계를 통해 아동 양육비 지원 강화 등 민생정책 개선
- **(행정심판)** ‘행정심판통합기획단’ 출범, 법률안 마련 등 ‘원스톱 행정심판’^{국정교제}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구술심리 확대 등 국민의 행정심판 접근성도 강화
※ △‘EASY 행정심판(청구서 자동완성 시스템) 도입기관 확대, △집행정지 효력기간 30일 연장
- **(부패방지)**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 가액 정비 등 법·제도를 내실화하고, 현안에 적극 대응하여 청렴수준 향상 및 ‘청년의 공정한 도약 기회 보장’^{국정교제}
※ △지방의원 외유성 국외 출장 방지 등 자치법규 개선, △선관위 특혜채용 의혹 전수조사 등
- **(공익보호)** 각급기관의 보조금 등 부정수급 실태조사 및 환수 노력을 견인하여 공공재정 누수를 방지^{국정교제} 하고, 보상 수준을 높여 공익신고 등 활성화
※ △유가보조금·농업직불금 등 부정수급 취약분야 실태조사 결과 101억원 환수 등 조치 권고

2 평가 및 보완사항

- 지속적 권익구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 취약계층의 고충 지속 발생
▣ 민원 빅데이터 분석, 현장소통 강화 등을 통해 정책의 사각지대를 신속히 포착하고 적극 지원하여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구현에 기여
-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우리나라의 법·제도적 규제 등 정부 효율성이 전년보다 하락(64개국 중 38위, 2단계↓)하여 획기적 전환 필요
▣ 현실과 괴리된 법·제도·규제를 적극 개선하여 공정과 상식을 회복한 ‘반듯한 나라’, ‘역동적 경제’를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

II. 2024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

1 업무 추진 여건

- '3高 1低' 경제상황 장기화로 야기되는 민생 고충의 적극 해소 필요
 - '24년 경제성장률 전망(2.1%) 상승 등 경제여건이 나아지고 있으나, 세계적 고물가·고금리·고환율·저성장 기조는 여전한 상황
 - 이로 인한 서민·소상공인, 청년층, 취약계층 등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우려되는 만큼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는 노력 필요

정책방향

⇒ 민생현장 소통 강화 및 적극적 고충 해소로 실질적인 권익 보호

- 출범 3년차 정부에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기대하는 국민
 - 국정과제 및 핵심 정책 추진 3년차인 만큼 체감할만한 정책 성과가 나타날 시기라는 국민의 기대 수준이 높아진 상황
 - 부처 및 부서 간 칸막이를 해소하여 국민의 정책 수요에 즉시 대응하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

정책방향

⇒ 칸막이 없는 행정을 통해 국민 불편·부조리를 신속 해결

- 공정과 상식의 확립을 바라는 국민 요구 증가
 - 제22대 총선 전후로 나타날 수 있는 인사청탁·이권개입·전관특혜 등 카르텔형 부패로 인해 국민의 정부 신뢰가 하락할 우려
 - 국가청렴도('23년 63점/32위, 국제투명성기구 발표, '24.1월)의 지속적 상승을 위해 지방의회의원·지자체장 행동강령 위반 등 부패 관행 근절 필요

정책방향

⇒ 부패 사각지대 엄정 대응으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정부 확립

◆ 국정 3년차를 맞아 현장·민생중심의 권익구제를 강화하고, 반부패·청렴 문화를 확실히 정착시켜 청렴선진국으로 도약

비전

따뜻한 권익구제, 반듯한 청렴사회

핵심목표

현장·민생 중심의
빈틈 없는 권익구제

국민참여·데이터 기반
신속한 제도개선

이권·카르텔 없는
청렴사회 실현

주요
과제

- ①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민생 고충 해결
- ② 증가하는 민원의 효율적 감축 추진
- ③ 빠르고 편리한 행정심판 운영

**국민의
민원 만족도 향상**

- 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국민 참여 확대
- ② 빅데이터 분석으로 민생 현안 즉시 파악
- ③ 국민불편 해소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불합리·불필요한
제도 및 규제 정비**

- ① 민생침해 및 지방부패 근절
- ② 반부패 법령·정책의 합리적 정비
- ③ 미래세대를 위한 청렴문화 확산
- ④ 균형감 있는 신고자 보호·지원

**세계20위권
청렴선진국 진입**

Ⅲ. 핵심 추진과제

1 현장·민생 중심의 빈틈 없는 권익구제




◇ 정부 내 독립적·최종적인 권익구제기관으로서 현장과 민생 중심으로 국민의 어려움을 내 가족의 일처럼 적극적으로 해결

1-1.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민생 고충 해결

□ 민생·안전 등 긴급민원 신속 해결

-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만)** 취약계층 긴급·구호민원 해결을 위해 부서별 전담자를 지정하고, 접수 즉시 현장출동, 긴급조치 등 최우선 처리
 - ※ (예) '국민콜110' 등으로 접수된 취약계층의 긴급 상담(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중단에 의한 조손가정 아동의 끼니문제 등)에 대해 전담자가 우선 출동하여 운영 재개 등 권고

취약계층 긴급·구호민원 중점처리 분야

주 거	복 지	세 무 · 금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 보수 등 공공임대 주택 세입자 고충 ✓저소득층 주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층 생계급여 ✓조손가정 아동양육비·생활보조금 등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세제혜택 ✓저소득층 소액 생계비 대출, 서민금융공급 등

- **(현장형 옴부즈만 강화)** 소외지역·취약계층 등을 찾아가 고충을 상담해주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적극 운영하여 국민의 고충을 현장에서 해결
 - ※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기업·소상공인, 청년세대 등을 중점대상으로 연 100회 운영
- **(안전 위협요인 해소)** 교통안전 민원을 토대로 사고 유발요인을 분석하고 경찰·도로교통공단과 함께 개선하는 등 안전 위협요인의 근원적 해소 추진
 - ※ (예) 포트홀(도로 위에 발생하는 구멍)로 인한 차량 및 인명 피해 민원을 분석하여 사고 빈발구역을 파악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포트홀 발생 신고 및 보수 체계 개선

안전분야 기획조사 과제(안)

교통안전	· 신호체계, 교통안전시설, 도로 등 지역단위 교통안전 종합개선방안 마련 ·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포트홀 관련 피해방지 대책 마련
생활안전	· 대규모 택지개발 과정의 도로·암반 등 주민 생활안전 우려 해소 · 공동주택 보행통로 및 쪽문 추가설치를 위한 녹지활용 개선방안 마련
주민안전	· 중단된 재개발 등 사업구역 내 방치된 빈집 관리 개선방안 마련 등

□ 집단갈등 해소에 역량 집중

- **(제도적 기반 마련)** 집단민원(5명 이상 제기한 민원) 이송·조정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다수의 국민이 관련된 사회문제를 조속히 처리할 기반 마련
 - ※ (예) 집단민원의 해결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권익위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한 사안에 권익위가 즉각 개입할 수 있는 권한 부여(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 ※ '23년 '영주 다목적댐 준공 지연' 등 집단민원 230건을 해결하여, 128,374명의 숙원 해소
- **(선제적 대응)** 언론보도·민원동향·'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 등을 토대로 국민이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불편사항을 발굴하여 해결
 - ※ 지자체 등 각급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지역 현안, 장기방치된 집단민원 수요 파악(매월)
- **(적극적 해결)** 민원 관련 현장조사 과정에서 관련 기관의 이해관계가 원만히 조율될 경우 현장합의를 통해 신속히 국민 권리를 구제

□ 경제활력 저해 민원 적극 해결

- **(규제민원 해결 강화)** 과잉규제, 세금부과 등 기업 운영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규제 민원은 현장출동·처리상황 점검(격주) 등을 통해 중점 처리
 - ※ (예시) 국유림 대부허가 요구 기업 민원, 기부채납 사업비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요구 등
- **(영세기업 고충 해결)** 기업들의 고충을 현장에서 청취하는 '기업고충 현장회의'(매월)를 통해 영세기업·소상공인 등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
 - ※ 지자체, 중기부·고용부 등 관계기관과 경영 현장을 방문하여 맞춤형·현장형 해결방안 마련
- **(민생활력 회복 기획조사)** 중·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및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빈발민원 현황·원인을 분석하여 불합리한 제도·관행 적극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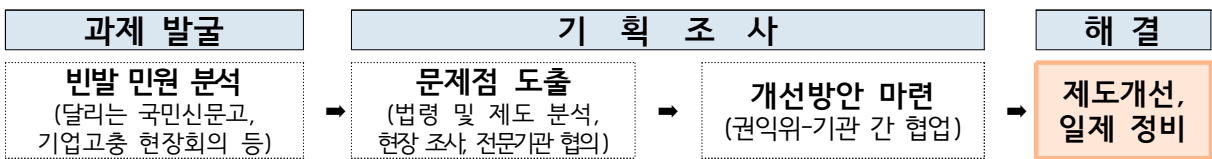
재산권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구역의 광범위한 설정과 강력한 행위규제로 재산권 침해, 지역발전 저해 ■ 군(軍) 징발토지 환매기한 제한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 징발토지 환매권이 대금완납일 기준 5년으로 제한되어 실효성 없이 운영
기업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미제출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배제 불합리 등 ■ 불합리한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 변경 신청기간 초과 시 강제 출국조치 등 외국인노동자 고용 기업에 과도한 규제

1-2. 증가하는 민원의 효율적 감축 추진

◎ '23년 국민의 민원 제기건수는 1,237만건으로, 지자체 등 행정청의 민원 해결역량 강화 및 칸막이 없는 협업을 통해 행정 일선에서부터 국민 불편 해소 필요

□ 부처간 협업 및 기획조사를 통한 빈발민원 근본 해소

- **(기획조사)** 주거·금융 등 민생과 직결되거나 개선대책을 전국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민원은 근본 원인을 파악하여 부처 간 협업으로 즉각 개선
 - ※ (예시) 사회취약계층 대상 보험계약보험금 지급요건 등 금융제도 개선, 농업인 대상 건강보험료 감면제도 안내 미흡, 수도요금 체납자 단수 예고방식 개선 등



□ 지역의 문제 해결역량 강화를 위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 **(운영근거 규정 보완)** 변화된 행정환경과 그간의 운영현황을 반영하여 시고위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근거 마련
 - ※ (예시) 일정 규모(예:인구50만) 이상의 지자체에 의무설치, 위원 임기 자율성 부여 및 자격요건 완화, 시고위 명칭 변경(예:시민권익위)(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 **(신규설치 및 운영 지원)** 신규설치(현재 81개 지자체 기설치) 희망 지자체 대상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권익위의 민원처리 자문역할** 강화
 - * 멘토-멘티 지정 등 우수기관 매칭, 미설치 지자체 대상 합동 설명회 개최
 - ** 생소하거나 복잡한 민원의 경우 유사사례 및 적용 법령에 대한 자문 의견을 제시

□ 각급 기관의 민원처리 전문성 제고

- **(민원 해결역량 강화)**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자 대상 민원처리 실무교육 등을 통해 민원 해결의 신속성, 국민의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제고
- **(실질적 민원해결 도모)**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체계 개선, 기관별 '평가등급 지도' 공개 등을 통해 기관의 적극적인 민원 해결 노력 유도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체계 개선방향(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 : 총 306개 기관(중앙행정기관 46, 시도교육청 17, 광역 17, 기초 226) ■ 평가지표 : 민원서비스 국민신뢰도 평가 도입 등 민원 예방을 위한 지표 강화 ■ 결과공개 : 기관별 평가등급을 지도로 시각화하여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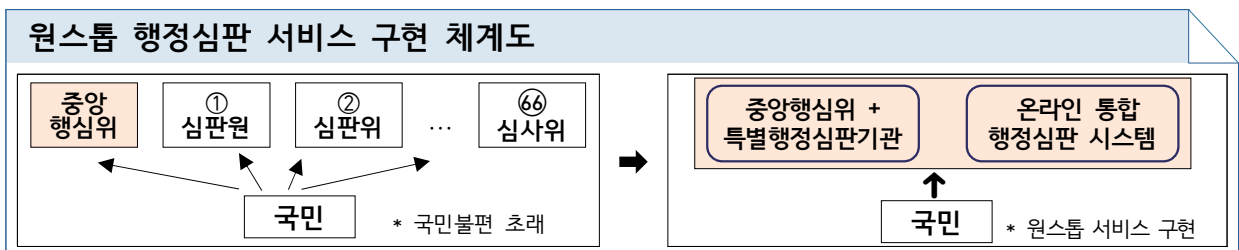
1-3. 빠르고 편리한 행정심판 운영

□ 국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행정심판 서비스 제공

- **(신속한 재결)** 행정처분을 한 공공기관이 관련 서류를 한 번에 제출하도록 하고, 답변서를 미제출해도 재결이 가능하도록 행정심판법 개정 추진
 ※ '23년 행정심판 처리건수는 총 27,887건으로, 절차 효율화로 더 많은 국민의 권익 구제 가능
- **(더 쉬운 청구)** 국민이 행정심판을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청구서가 완성되는 'EASY 행정심판' 서비스 활성화
 ※ 이용기관을 확대(51개→60개)하고, 모범 재결례를 축적하여 자동완성 기능 강화 예정
- **(폭넓은 권익구제)** 중앙행심위 출석이 어려운 국민이 어디서든 구두 진술할 수 있도록 구술심리를 활성화*하고, 부당한 처분**에 의한 권익 침해를 적극 구제
 * ('24년) 서울청사 활용 → ('24~'25년) 지자체 청사 활용 → ('25년) 모바일 화상 심리 시스템 구축
 ** (예) 행정청 실수로 잘못 지급된 금원을 환수하는 것은 법률 위반은 아니나 부당한 처분일 수 있음
- **(중앙행심위 총괄기능 강화)** 중앙-각급 행심위 간 소통을 강화하고, 행심위 간 편차가 큰 사안의 원인 분석 및 개선으로 심판의 신뢰도 제고
 ※ (교육행심위) '교권보호' 사건의 재결례를 공유하고 재결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등

□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 국정과제

- **(심판기구 통합)** 행정심판을 원하는 국민이 어디에 청구할지 알기 어려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행심위와 특별행정심판기관(66개) 통합 추진
 ※ '통합기획단' 출범(권익위·행안부·법제처, '23.6월) 후 행정심판기구 현황 분석, 국민·전문가 의견수렴, 학술대회(11월) 등을 통해 통합안(행정심판법 일부 개정) 마련 → '24년 국회 제출
- **(시스템 통합)** 각 심판기관의 신청·창구·접수·처리 시스템을 일원화한 '온라인 통합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으로 심판청구의 편의성 제고
 ※ (추진 일정) '24년 1단계 구축 → '25년 개통 → '26년 시스템 고도화



② 국민참여 · 데이터 기반 신속한 제도개선

◇ 디지털 플랫폼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더 폭넓게 듣고 정확히 분석하여 불합리한 정책과 제도를 국민의 시각에서 개선

1-1.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국민 참여 확대

□ 국민 중심의 디지털 소통 플랫폼 운영

- **(민원 제기 편의 제고)** 국민이 민원·정책제안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 이용기관 확대('27년 1,300개 목표) 및 인증 절차 간소화 추진
 - ※ 국민신문고 :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민원창구를 통합·연계한 시스템. 현재 1,163개 기관 이용
 - ※ 로그인 수단에 기존 공인인증서 방식 외에 모바일 신분증을 추가하여 편의성 향상
- **(국민생각함 활성화)** 국민생각함에 정책 의견을 주는 '국민패널을 상시 모집('23년말 2만2천여명)하여 대표성을 높이고, 주요 이슈 및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수렴 실시
 - ※ 국민생각함 : 국민이 직접 정책제안·개선 등에 참여하는 온라인 참여 플랫폼
 - ※ 현안에 대해 소관기관과 함께 의견을 수렴하고, 생각함 활용 정책화 실적은 민원서비스 평가에 반영

□ 국민의 소중한 제안과 적극행정 신청을 정책으로 반영 국정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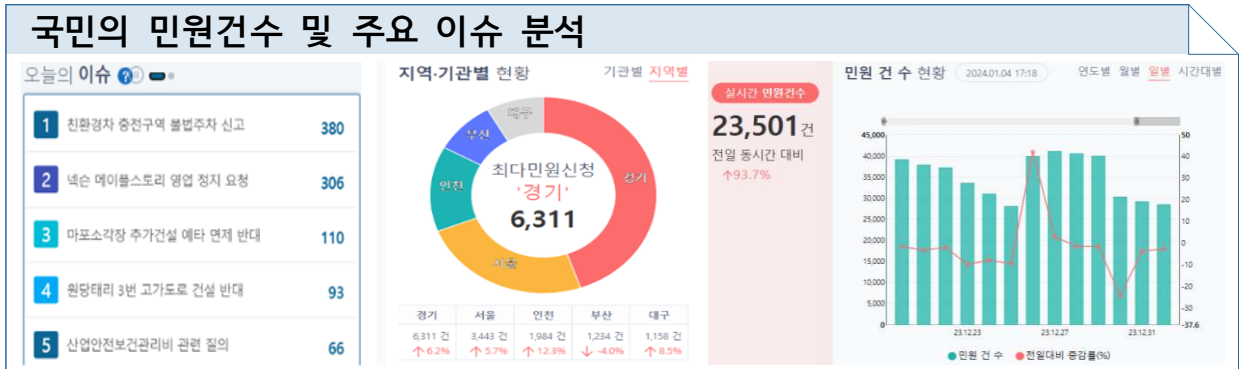
제안 접수·처리	정책화 과제 발굴	정책화 과제 선정	정책화 추진	국민 체감
(국민) 국민제안 신청 (소관 기관) 국민제안 접수 및 1차 검토·답변 소관 기관	⇒ 모니터링, 정책화 과제 발굴 대통령실·권익위	⇒ 정책화 추진과제 선정 국민제안심사위원회	⇒ 정책 반영 제도개선 추진 권익위·소관 기관	⇒ 이행관리·홍보 대통령실·권익위

- **(정책화 지원)** '대통령실 국민제안' 실시간 모니터링,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민생 안정 및 국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정책화 후보과제 적극 발굴·지원
 - ※ 국민제안 연 5만여건 등을 전수 모니터링하며, 정책화 후보과제 1,200건 이상 발굴 목표
- **(정책화 이행)** 선정된 정책화 과제는 소관 부처가 신속히 개선하고, 정책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행점검 및 홍보 지원 강화
 - ※ 정부 출범 후 60개의 정책화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24년 중 누적 100개 돌파 예상
- **(플랫폼 통합)** 민원·제안·청원 원스톱 처리 등 국민편의 제고 및 소통 기능 강화를 위한 '국민제안 통합플랫폼' 개통 예정('24.2월)
- **(적극행정 활성화)**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의 확산(컨설팅, 우수기관 포상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권리구제 강화와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활성화
 - * 국민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를 권익위가 검토하여 관계기관에 개선방안 등을 권고하는 제도

1-2. 빅데이터 분석으로 민생 현안 즉시 파악

□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현안 이슈 파악

- **(국민 관심사항 실시간 분석)** 국민신문고 등 민원시스템에 접수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국민의 관심사항을 즉시 파악하고 분석 결과를 전 국민에게 공개
 - ※ '한 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주요 이슈, 민원 건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시기/기관/지역별 분석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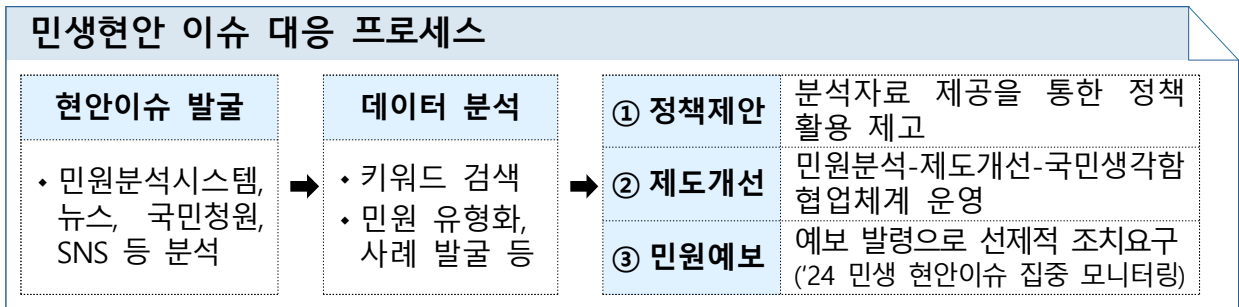
- **(국정방향 맞춤형 분석)** 민원데이터 기획분석을 통해 각 부처의 국정과제 이행 및 국정 현안의 추진 방향 제시

'24년 기획분석 주제(안) * 민원 건수 집계기준 : '22.1.~'23.12.

- ✓ (민생현안) 물가 안정, 일자리, 고령층 생계비 부담 등 국민 경제생활 고충 관련(3,174건)
- ✓ (국민안전) 시설물, 교통, 소방, 식품 등 국민안전 위해요소 관련(22,749여건)
- ✓ (사회적 약자보호) 노인, 한부모가정, 아동 등 취약계층 관련(18,978여건)
- ✓ (생활밀착형 개선) 주거·복지, 환경·보건, 도로·교통 등 생활 불편 관련(902,549건)

□ 민생 현안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

- **(현안이슈 대응)** 민생 현안이슈 분석으로 파악된 국민의 관심사안에 대해 민원예보를 발령하여 관계기관의 신속한 대응 유도
 - ※ ('23년 민원예보 이슈) 취약계층 주거(2월), 유기 동물(2월), 예비군 훈련(7월), 저출산 난임 지원 확대(8월), 반대 급증(11월), 학교 밖 청소년 수능 모의평가(12월) 등



1-3. 국민불편 해소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 제도개선을 통한 국정운영 지원

- **(국정현안에 맞춘 제도개선)** 민생경제 활력, 공정사회 구현 등 국정목표와 국민의 목소리를 분석하여 개선과제를 선정하고 법·제도 개선 추진

분야	문제점	개선방향안
청년세대 지원	<청년세대 공정기회> [국정과제 91] • 국가자격시험에서 공직자에게만 불합리한 특례 부여	⇒ 무시험 자격부여, 시험과목 면제 등 과도한 공직경력 인정 특례 개선
	<청년 주거환경 개선> [국정과제 92] • 대학교기숙사의 노후화 및 다인실 중심 운영 등 청년주거환경 열악	⇒ 청년의 선호를 반영한 대학교 기숙사생활관 환경 개선으로 주거환경 개선
민생경제 활력 제고	<폐업위기 소상공인 재기 지원> [국정과제 1] • 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지원자 기준이 엄격하고 부실한 컨설팅으로 정책성과 저조	⇒ 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실효성 제고로 폐업 위기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
	<소상공인 부담 완화> [국정과제 1] • 특정 업종만 근린생활시설로 인정해주고 있어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증가	⇒ 근린생활시설 업종제한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소상공인의 영업부담 완화
공정사회 구현	<공공계약 불공정 관행 개선> [국정과제 14] • 공공계약 문서에 권위적 표현 잔존, 불공정 조항, 갑질 관행 등 존재	⇒ 공공계약 부문에 잔존하는 불공정 조항 개선, 이의제기 절차 명확화 등 공정계약 정착
	<지방의회 의정정보 공개> [국정과제 14] • 지방의회 의정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투명한 의정활동에 한계	⇒ 회의생중계 및 영상회의록 공개, 회의록 공개 기한 명확화 등 의정정보 투명 공개

- **(국정과제 이행)** 국가자격시험 운영 관련 청년층 불편사항 해소 및 공직자 관사 관련 부조리 개선을 통해 **국정과제의 연내 이행 추진**

권익위 국정과제 관련 제도개선 주요 추진현황
✓ (국가자격시험 불편 해소) 공인어학시험 인정기한 확대(2년→5년) : '23.11. 개선권고 완료
✓ (국가자격시험 관리 강화) 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 인정 특례 폐지방안 검토 중 : '24년 예정

□ 국민의 제도개선 체감도 제고

- **(이행관리 강화)** 개선 권고사항이 신속히 이행되어 국민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행전략회의·컨설팅**을 통해 **각급 기관의 개선과제 이행을 지원**
 ※ 이행현황 점검 및 이행부진요인 분석결과에 맞춰 컨설팅 등 실시('23년 이행률 78.4%)

3 이권·카르텔 없는 청렴사회 실현

◇ 법과 원칙을 지켜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

1-1. 민생침해 및 지방부패 근절

□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현장 속 부패근절

- **(정부업무 위탁·대행기관 집중점검)** 예산 100억원 이상이면서 재해구호, 시설안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재정 누수 집중점검
※ 대상기관(안) : 재해구호, 건설·상하수도·전기공사, 산업안전, 선박검사 등 관련 20여개 기관

주요 점검분야(예시)

- **(계약 관련 특혜)** 법령·내규의 근거 없는 특정 업체와의 부적절한 수의계약 등
- **(부적정한 회계관리)** 정부업무 위탁·대행 예산 방만 운영, 증빙자료 관리 미흡 등
- **(재정 누수)** 지출 증빙없는 회의비·출장비 지급, 업무추진비 선결제·분할결제·사적 사용 등

- **(부패 현안 적극 대응)** 권익위에 신고된 사건 및 언론 기사 등을 분석하여 파악한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에 대해 기획 실태조사* 실시
* (예) 위험업무 상시 종사자가 아님에도 위험수당 지급, 지방의원 등과 지자체 간 부당 수의계약 등

□ 지방현장의 관행적인 부패 취약분야 개선

- **(지방의회 청렴역량 강화)** 소지방의회에 대해 청렴도평가*를 실시('23년 92개→'24년 243개)하고, 지방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 대상 청렴교육** 강화
* 의정활동·의회 운영 관련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지방의회 맞춤형 지표 적용
** 지방의회 대상 직접 교육, 의원대상 반부패 행위규범 등 맞춤형 교육자료 제작·배포
- **(취약분야 개선)** 지방세 징수포상금 방만 운영, 피복비 부정 사용, 지방의회 의원의 계약 관련 이권 개입 등 지방 일선의 재정 누수 취약부문 점검·개선
※ 청렴도 평가 결과가 저조한 광역·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 등을 대상으로 중점 점검
- **(자치법규 개선)** 지방의회 운영, 인사·회계 등 기관 운영, 사업추진 등 자치법규 속 부패·불공정 유발요인을 중점적으로 평가·개선
※ '22년(79개), '23년(78개)에 이어 86개 지자체에 대한 평가 완료 추진(약 15만개 자치법규 전수평가)
※ (예시) 건설공사 부실시공 관리 강화, 기업 유치·지원 관련 심의위 공정성 제고 등

□ **공공재정 부정수급 실태 관리 강화** 국정교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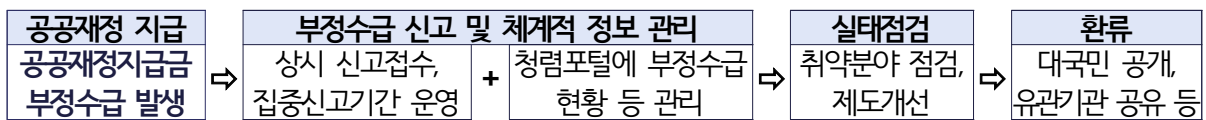
- **(취약분야 집중점검)** 민간,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등 국가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회보장서비스, 교육 등 취약분야 집중 점검 실시

취약분야 집중점검 주요내용(안)	
사회보장서비스	-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의 제공자가 서비스 제공 없이 부정하게 정부지원금을 수급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고 근본 원인 개선
감사 점검 사각지대	- 정부지원금의 목적외 사용, 다른 정부 지원사업과 중복수급 등 방지
교육	- 원장이 보육보조교사를 허위 등록하여 부정 수급하는 경우 처벌 강화

- **(부처책임 강화)** 부정수급 데이터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대국민 공개 및 재정당국 등 유관기관 공유를 통해 내·외부** 통제 강화

* (현행) 기관별 부정수급 금액·비율 분석 → (개선) 기관·법령·지원금별 다각적 분석

** 예산편성 등에 반영되도록 기획재정부에 자료 제공



1-2. 반부패 법령·정책의 합리적 정비

□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반부패 법령·정책 개선**

- **(반부패 행위규범 합리화)**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행위규범 속 현실과 괴리된 규정을 합리화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

※ (청탁금지법)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적 상황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음식물 가액(현행 3만원) 등 조정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공직유관단체 신청, 소액 강의를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 검토

- **(제도운영 실효성 제고)** 현장조사·소통을 통해 반부패 행위규범의 기관별 운영현황을 점검·개선하고, 선거철 인사청탁·이권개입 등 테마별 점검 실시

※ (청탁금지) 기관별 위반신고처리 등 운영실태 점검, 부적절 처리사례 적발·시정(~6월) (이해충돌) 수의계약·가족 채용 제한 등 행위기준별 제도 운영 현황 점검(9~12월)

□ **디지털 기술 기반 부패방지 시스템 고도화**

- **(부패데이터 활용도 제고)** 반부패 종합 플랫폼인 청렴포털 등에 축적된 데이터*의 공유·활용을 강화하여 부패 취약분야 발굴 및 선제적 대응

*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 부패공직자·행동강령 위반자, 반부패 법령별 제도 운영 현황 통계, 청렴도 평가 데이터 등('19년 이후 신고·보호·보상사건 등 63,233건 누적)

청렴포털 운영 개요

- (의의) 부패·공익침해행위 등에 대해 신고 상담부터 신청, 보호·보상까지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 (이용기관) 1,122개 공공기관
- (활용) 각 기관에서 입력한 부패공직자 정보 등을 토대로 부패데이터 분석, 반부패 정책 수립에 활용, 기관 협업 등



- **(디지털기술 기반 부패대응)** AI·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부패위험을 분석·탐지·예측하는 '부패데이터 활용 시스템' 구축방안 마련
 - ※ 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유사사례 분석, 타 기관 보유 데이터 연계방안 등 연구

1-3. 미래세대를 위한 청렴문화 확산

□ '2030 자문단'을 활용한 청렴정책 디자인

- **(청년 여론수렴)** 2030자문단*을 중심으로 청년이 원하는 정책을 신규 발굴하고, 기존 정책의 청년 친화적인지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여 정책에 환류
 - * 청년보좌역(단장)을 중심으로 청년세대 여론 수렴 및 청년정책권익위 정책에 대한 자문 등 수행
- **(정책 제언)** 주제별·테마별 정책 토론회, 청년 민생현장 방문 등을 통해 2030자문단이 직접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청렴 정책을 디자인
 - * 공정, 청년 일자리, 저출산, 주거복지 등 청년 관심사를 중심으로 토론회·포럼 등 실시

□ 공정하고 청렴한 채용문화 확산 국정고제

- **(채용비리 적발강화)** 공정채용 전담기구인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중심으로 공직유관단체(23년 1,386개) 채용실태 전수조사, 위험군 집중조사* 등 실시
 - * 감독기관의 인사감사 권한 부재로 사각지대에 놓인 공직유관단체(23개)는 권익위가 직접 조사 예정
- **(채용비리 재발방지)** 지방공직유관단체(415개 대상) 채용규정 중 법령을 위반하거나 누락한 항목을 개선하여 비리 유발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
 - ※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 가점 및 동점자 우대, 차별 소지 질문금지 등

□ 교육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

- **(미래세대 청렴가치 내재화)** 초·중·고, 대학생, 청년인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확대 운영하여 청렴의 가치를 내재화
 - ※ 전임 교수요원 등 전문인력 및 교육시설 보강, 해외 반부패기관과의 협업 및 기술 지원(ODA) 등을 통해 연수원의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 학술지 발간·교육프로그램 고도화 등 추진
- **(선출직·고위직 청렴 리더십 배양)** 선출직 공직자* 및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 교육을 중점 추진하여 청렴 리더십 배양, 청렴 역량 강화
 - * 22대 총선 이후 각 정당 의원 연찬회, 당선자 모임 등과 연계하여 의원 보좌진 대상 교육 실시

1-4. 균형감 있는 신고자 보호·지원

□ 신고 활성화를 통한 부패감시 기능 강화

- **(집중신고 기간운영)** 권력형 부패, 불공정 행위 등 부패·공익 현안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신고를 통한 부패감시 기능 활성화
 - ※ 부패·공익신고 빈발 분야, 언론보도 등을 분석하여 부패 취약분야 발굴, 분야 선정 집중신고기간 중 접수되는 신고사건을 분석하여 필요시 기획 실태조사로 연계
- **(신고사건 처리 강화)** 부패·공익침해 가능성이 큰 사건에 대해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재조사요구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규정 보완 검토
 - ※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핫라인 구축 등 신고사건 처리 관련 협력 강화 병행
 - ※ 조사기관의 상급·감독기관에 재조사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 신고자 보호·지원 법령 정비

- **(신고자 보호·지원 규정 일원화)** 반부패 5개 법률에 제각각 규정된 신고자 보호·지원 규정을 통일하여 법령 불균형 해소 및 보호 수준 향상
 - ※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제도, 이행강제금, 위반자 제재수준 등 미적용 법률 보완
- **(하위법령 정비)** 부패·공익신고 및 부정청구 신고 보상·포상 수준이 동일해짐(23.12.시행령 개정)에 따라 하위 운영지침 등 신속 개선
 - ※ 포상금(최대5억원), 보상금 지급율(최고30%), 보상금 하한액(30만원) 수준 통일

□ 보호·보상 업무의 합리성 강화

- **(합리적 비밀보장)**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자에 대한 명확한 징계·고발기준을 마련*하여 신고자 보호조치의 법 적합성 제고
 - * 피신고자 고의·과실여부, 신고자와 피신고자 관계, 신고에 이른 경위 등
- **(신고자 지원 확대)** 신고내용의 공익실현 기여도 등을 반영한 보상금 지급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구조금 제도개선*을 통해 신고자 지원 강화
 - * 구조금 전담팀을 운영, 처리기한, 의료비 상향 등 구조금 지급 관련 세부기준 마련
- **(피신고자 권익침해 방지)** 균형 있는 시각으로 신고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하고, 무고 등으로 인한 피신고자 권익침해 방지
 - ※ 신고사건 이첩 여부 판단 시 피신고자에게 의견·자료제출 기회를 적극 부여하고, 사건 종결 시 피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부패방지권익위법 등 개정)